

정부가 세운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3~2027년)이 윤곽을 드러냈다. 6차 계획의 핵심은 역시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2020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한 화력발전 공급 용량을 1580만kW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력 공급 능력(8000만kW)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는 역대 기본계획 중 최대 수준으로 매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민간 발전사들의 대약진이다.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업체 중 민간 기업은 8개로 한전 발전자회사(4개)의 두 배에 달한다. 민간 업체가

## 열리는 민자발전 시대



이 정 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담당할 화력발전 용량은 1176만kW다. 이는 6차 계획에 반영될 전체 화력 용량의 74.4%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량에서 15.8%를 차지했던 민간 발전사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된 동양그룹, 삼성물산, 동부그룹 등은 발전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동양은 기존 가전, 섬유, 건재 등 3대 사업부를 정리하고 금융과 발전·시멘트를 주축으로 그룹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동부그룹도 에너지 부문을 그룹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충남 당진에 2조2000억 원을 들여 100만kW급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데 이어 이번에 강릉에 200만kW급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돼서다.



민간 발전사들의 화력발전 참여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력시장 내 발전 경쟁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숫자상 민간 발전사들이 공기업인 발전자회사를 넘어 다수가 되면서 전력 시장의 게임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민간발전과 공공발전 사업자간 갈등은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시장에 소수자로 참여해 발생한 일이 대부분”이라며 “민간과 공공발전 사업자간 적절한 관계 설정을 위해 전력시장 규칙이 어떻게 변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사들이 주목받으면서 전력시장에서 민간발전 사업자들이 공공 발전사(발전자회사)에 비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종의 이윤 규제 제도인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 받는 공공발전사와 달리 민간 발전사들은 정산 조정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발전단가와 전력판매간 차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다. 한전과 정부가 민간 발전사들의 제도적인 초과 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전력구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선 설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발전 자회사들은 시장 원리를 훼손하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민간 발전사들이 올리는 수익은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로 전력공급난이 풀리는 2015년부터는 SMP 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번 6차계획 확정으로 민간 발전사들은 명실상부 국가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력당국은 공정한 게임을 위해 민간·공공 양측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규칙 개발에 나설 때다. 다가오는 민자발전 시대에 맞춰 민간 발전사가 과거 상대적 약자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전력시장 내 위상 강화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KEA